

"타결땐 양국 여론설득이 가장 중요"

"양측 모두 만족할 문구로 합의해야"

기사입력 2015.12.27 18:02:46 | 최종수정 2015.12.27 19:56:02

◆ 위안부 협상 28일 분수령 / 전문가 제언 ◆

일본 언론에 보도된 한·일 외교장관회담 쟁점 및 정부 입장

한국 측 입장	쟁점	일본 측 입장
일본, 명확하게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인정해야	위안부 동원 법적 책임 및 강제성 인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책임 종결, 강제성은 증거 없어
일본 정부 예산 통해 납득할 만한 액수 (최대 20억엔, 약 194억원)를 배상해야	피해자 배상	1억엔(약 9억7000만원) 규모 새로운 기금 설립해 피해자 지원, 한국도 기금에 공동 참여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 직접 찾아 사과해야 (정대협 측)	사과 방식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책임' '사과' 언급,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 면담 후 사과
(정부)민간인이 설치해 정부가 가타부타 못해 (민간)소녀상 철거 조건으로 협상 불가능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협상 타결 후 한국이 남산 등으로 자발적 이전
위안부 할머니 한 명이라도 반대 땀 일본 사과 수용 못해(정대협 측)	해결 수준	한국,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보장해야, 내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 입회하에 선언해야

28일 개최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후에도 양국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부 간에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한·일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측 모두 해석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문구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과 연행 강제성을 인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 기반인 일본 보수 우익은 이와 반대로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고, 위안부 활동도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 우익이 보기에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한국에 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복하러 가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며 "아베 정권이 실제로 끝난 일(한일청구권협정)에 추가 조치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 이원덕 교수는 "양국이 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

다"며 "내용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고 일단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일본연구소 소장)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기시다 외무상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니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국 쟁점에서 가까워진 게 없는데 갑자기 회담을 하고 공동회견을 한다는 것을 보면 일본 측에서 좀 더 나아간 뭔가를 제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양기호 교수는 회담 전망을 불투명하게 봤다. 양 교수는 "이전부터 계속 협상 과정을 거쳐 장관급 회담이 결정된 게 아니고 아베 총리가 지시해서 부랴부랴 만난 것"이라며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는데 과연 타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입장에서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진전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자리의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면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원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시민단체의 운동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며 "본질은 피해자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양기호 교수도 "책임 문제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풀린다"며 "일본 정부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일 처리 순서가 잘못됐고 맨 나중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